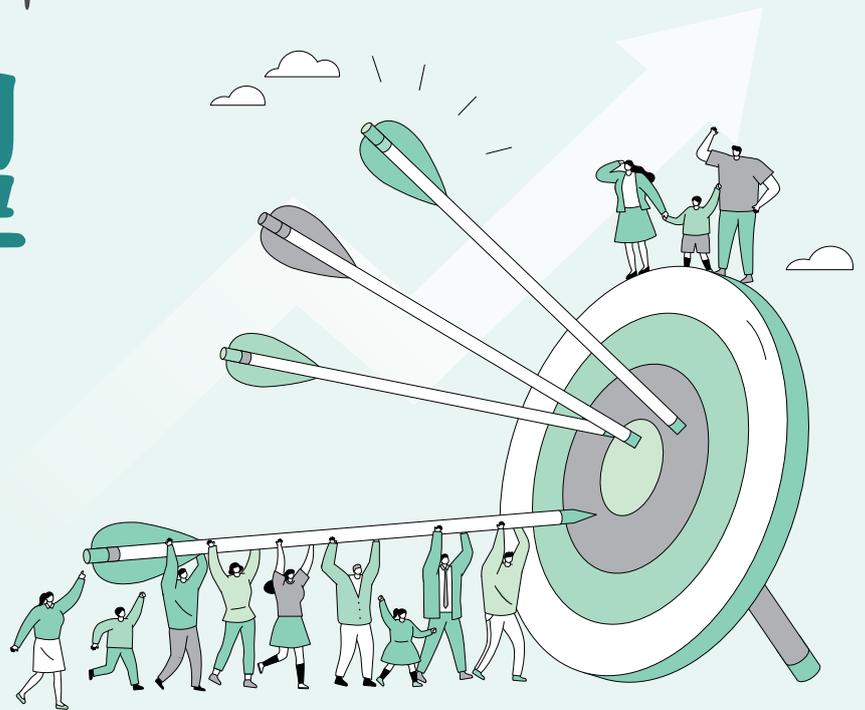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편집위원의 글 배재운

이슈

기술혁신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 어유경

고령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 ICT기반 서비스 개발 / 고영준

코로나시대 사회서비스, 안전한 서비스와 주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과제 / 김보영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 유병선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ICT와 노인일자리,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그 불투명하지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하여 / 한은지

미래사회 노인일자리, 사회적 가치의 생산으로 대전환해야 / 신우철

60+교육센터의 운영방향 / 하세운

베이비부머,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라 / 최철호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 이재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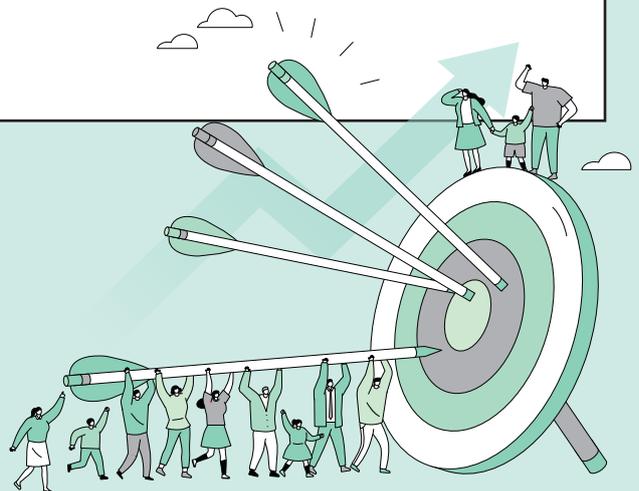
1 편집위원의 글 배재운

이슈

- 2 기술혁신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 어유경
- 5 고령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 ICT기반 서비스 개발 / 고영준
- 8 코로나시대 사회서비스, 안전한 서비스와 주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과제 / 김보영
- 13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 유병선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 16 ICT와 노인일자리,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그 불투명하지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하여 / 한은지
- 19 미래사회 노인일자리, 사회적 가치의 생산으로 대전환해야 / 신우철
- 22 60+교육센터의 운영방향 / 하세윤
- 24 베이비부머,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라 / 최철호
- 26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 이재춘





<고령사회의 삶과 일> 2호를 발행하며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변화의 물결을 여과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한 상황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뒤덮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이전과는 다른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오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고령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세대가 디지털에 적응해야 하고 비대면과 자동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 변화라는 거대 물결이 고령자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상에 발맞춰 본지의 이번 호에서는 ‘고령사회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있어 ICT가 주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ICT를 연계한 노인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특히 변화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해안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기인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의견들을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고령자의 삶을 예측하고 미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전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본지에 녹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인 고령자의 삶에 비추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고령사회의 삶과 일’의 발간을 지속해서 성원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배재윤**

기술혁신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어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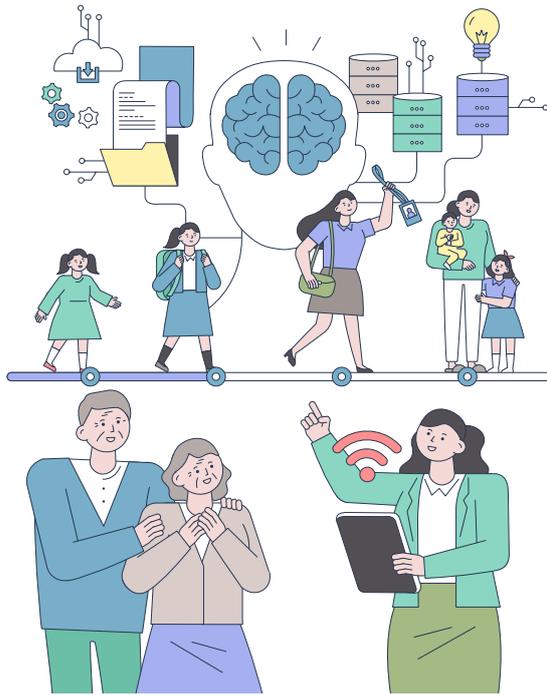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같은 주제를 논할 때면 기술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김없이 화두가 된다.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간들은 실직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룬다. 자연스럽게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주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회서비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를 사회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제공하는 휴먼서비스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휴먼서비스는 자동화가 어려우므로 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기술에 의한 총 고용 감소에 대응해야한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그러나 상황은 이보다 복잡하다. 기술혁신도 복잡하고, 사회서비스도 복잡하고, 이를 둘러싼 제도도 복잡하다. 과연 기술혁신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기술혁신의 영향을 피해 고용의 안전지대로 남을 것인가? 먼저, 기술혁신은 고용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기술혁신은 크게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생산 공정의 개선 또는 새로운 공정 도입을 의미하는 프로세스 혁신으로 나뉜다. 고용 감소는 주로 프로세스혁신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 시 노동력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혁신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수요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프로세스혁신을 통해서도 고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업무를 발생시키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더 넓게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감소한 비용만큼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생산과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기술은 언제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혁신을 이루었을 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업무를 발생시킬 때, 가격과



수요 등 시장요소들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 때는 기술혁신을 통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이 사회서비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사실 위 논의는 기술혁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정부 주도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을 해야만 한다는 혁신유인도, 혁신에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 등의 혁신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혁신유인과 혁신자원이 충분하다고 해도, 휴먼서비스 특성상 기술혁신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주를 이루는 휴먼서비스는 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먼서비스 중심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산업 내 기술혁신은 어려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기술혁신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혁신의 핵심은 기존의 문제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할 때 이를 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혁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하다. 복지 사각지대, 전달체계의 분절성, 정보비대칭성 등은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정책적, 제도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술혁신을 통한 해소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정보시스템들이 구축 및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도입되는 기술혁신도 일정 조건을 충족 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고용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주목 받는 신규 서비스 유형으로는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임상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치료제는 실생활에서 환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 및 운용 관련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업무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기존에 대면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고, 송출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업무들이 등장하였다. 기존 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교육하는 업무, 이용자에게 비대면 서비스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업무 등 파생 업무들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의 본질적인 장점은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접근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에도 비대면 서비스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고용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문에 기술혁신을 시도한다. 가격이 고정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거나 품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유지 및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시장 분석과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또한 적정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수요층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위 논의를 노인일자리아업에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인일자리아업은 산업이 아니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이 시도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노인일자리아업 상당수는 사회서비스 성격의 사업이며, 노인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 자체가 사회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노인일자리아업은 비교적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수많은 참여노인들의 임금을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로서는 혁신유인도, 혁신자원도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기술혁신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노인일자리아정책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단순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 구성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 중심의

현 구조에서 이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새로운 직무 발굴, 수요 창출과 품질향상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규 서비스의 개발, 수요 창출 등은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게 중요할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장형 사업단은 기술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혁신유인이 크다. 수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시장형 사업단은 더 많은 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구축 또는 적합한 플랫폼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농산물판매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네이버 산지직송 서비스는 마치 블로그와 같이 판매자와 상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가독성 있게 게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직배송으로 구입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장형 사업단도 참여노인들의 노력과 정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이를 원하는 잠재 수요자들을 플랫폼을 통해 발굴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혁신이 만능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용감소, 플랫폼 노동 문제나 디지털 소외와 같은 부작용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혁신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노인일자리아업에서도 노동대체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령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 ICT기반 서비스 개발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한 80대 노인은 새벽에 몸이 아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AI스피커에 달려 달라고 소리쳤다. 노인의 음성을 인식한 AI스피커가 긴급알림문자를 발송했고 보안업체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한 뒤 곧 바로 119구급대원을 출동시켰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전국에서 시범사업 등으로 진행해온 ICT기반 노인 돌봄 사업들이 노인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노인 돌봄을 위한 ICT의 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ICT는 실시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상황별 대응이 용이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사소통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데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돌봄 인력의 접촉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CT는 이처럼 노인들의 응급상황발생 시와 비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종방지, 의료 및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는 AI스피커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음악, 날씨, 뉴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스위치, 문열림 감지센서 등과 연계된다. ICT 케어센터에서는 AI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심리상담, 비상알림

및 방문조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감지센서, 활동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하기도 한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노인의 실종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는 실종방지 서비스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배회감지기가 있다. 배회감지기는 제품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되어있어서 보호대상자가 기기를 갖고 있으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가 일정구간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 스마트 폰에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서 실종사고 발생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다. ICT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따른 질병 원인을 분석해 예방하고 노인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이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도 헬스 케어 기능이 강화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판매중인 제품들은 혈압과 산소포화도 측정은 물론 심전도 측정 건강모니터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아울러, 낙상감지와 숙면체크 등의 기능도 추가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웨어러블 밴드를 활용한 IoT와 AI를 활용한 원격돌봄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웨어러블 밴드를 착용하면 기상이나 식사, 용변, 복약여부 등의 활동이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된다. 일정시간 이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활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긴급알림 신호를 보내 생활관리사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독거노인들을 24시간 케어 하는 스마트 맞춤형돌봄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서비스대상 가정에 센서가 천장에 부착되고 비 접촉 호흡감지로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해 재실여부 및 외출을 판단할 수 있으며, 취침시간 수면상태등도 파악해 이상 발생 시 자녀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 정부 등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고 이들이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집 안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기기 사용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있다. 독거노인 중에서 가장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들인데 디지털기기 사용능력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치매노인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는 단순하고 큰 하나의 버튼으로 위급버튼이 구성되어 조작이 편리한 편이다. 목걸이형은 충전단자가 작아 꽂아서 충전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나중에 자석 형태로 출시되어 쉽게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배터리를 항상 충전해야하는 단점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배회감지기 착용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을 치매환자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서 착용을 꺼린다고 한다.

노인의 안전생활을 위한 ICT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ICT서비스가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대상자인 노인들의 인지적 특성, 학습능력, 심리적 특성 등을 잘 반영하여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ICT서비스가 사용자중심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기조작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라고 해도 사용자인 노인들이 사용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곤란해 하는 노인들을 배려하여 노인들에게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가령, TV, 리모컨, 전화 등 기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노인들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노인들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시력, 청력 등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기기 조작의 어려움 외에 잘 안 보이는 글씨와 그림을 뽑는다. 몸에 차고 다니는 기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을 경우에는 글씨 등의 크기를 크게 하고 돋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비스의 정보를 시각만으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노인들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나 촉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상황발생 정보를 소리나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없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응급상황시의 지원을 위해 노인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이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세상에 드러나고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배회감지기와 같이 치매노인들의 실종방지를 위한 기기가 일종의 '낙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그 기기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처럼 디자인되어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위한 ICT서비스는 보호자 등은 물론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ICT 활용 기기가 조작하기 어렵고 읽기 어려운 나머지 노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기술은 기술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사용자를 맞추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기술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인들이 쉽게 조작하고 노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기기 사용에 따른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ICT서비스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명숙, 독거노인 외침 들은 AI 스피커, 생활 필수 서비스로 정착하다, 라이프타임즈, 2020년 8월 6일.
- 김지연·고영준 (2017). 고령자 안전생활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ICT융합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6(3), 113-124.
- 김진룡, “치매 낙인 싫어...” 배회감지기 착용률 1%, 국제신문, 2017년 6월 5일.
- 박선미·김수범 (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 백승균, 홍성균, 어르신 돌봄도 ICT로 스마트하게 24시간 관리, 충남일보, 2020년 5월 8일.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코로나시대 사회서비스, 안전한 서비스와 주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과제



김보영

영남대학교 부교수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들이닥친 지도 벌써 1년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로나19가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장기간 감염병 위험이 삶을 지배하는 경험 자체부터 우리의 삶을 영속적인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의 위험은 위험(risk)에 인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실과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대면성'의 특성이다. 사회서비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교육, 고용, 의료 등 모든 유형의 공공서비스를 포괄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과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진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나 심지어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일수록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더 큰 소외와

배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의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의 측면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기보다는 주변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대안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그 방향을 포괄적으로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적 사회서비스의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 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의 대응은 K-방역처럼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초기 한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2위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K-방역으로 지칭되는

성공적 방역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전국적인 이동제한령(national lockdown)을 경험하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 방역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반복적인 재유행에 따라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가는 일부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피해 업종에서 늘어나는 실업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히 상당부분 피해당한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희생자들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세심하고 안전한 지원이 필요했겠지만 방역에 우선된 정책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오히려 방역을 위해 취해졌던 조치는 막고, 중단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에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무시된 조치였던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크게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가서비스로 나누어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생활시설이었다. 아무래도 감염병에 취약한 대상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다보니 초기부터 높은 사망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초기 4~50%의 사망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40%에 육박했다(김윤, 2020).

그러다보니 초기 확산이 집중되었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취해진 조치는 이른바 '예방적 코호트 격리'였다. 대구시는 희망하는 시설에 한하여 시행했지만 경북에서는 3월에 2주 동안 강제적 조치로 내려져서 500여개 시설 1만여 명 종사자까지 격리되었었다(이지혜, 2020). 그 덕인지 해당 기간 중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 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송근배, 2020).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감금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20; 전국장애인철폐연대, 2020).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에 대한 주된 조치는 휴관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 말부터 휴관을 권고하였는데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장에서 무시되기 어려웠다. 확산세가 진정되었던 시기에는 일부 운영을 재개하기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진정세였던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해도 이용시설의 70% 이상이 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2020).

물론 휴관 중에도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면서 긴급돌봄을 실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긴급돌봄은 대상 기준이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보건복지부, 2020b) 기관마다 편차는 컸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이용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장애인복지관의 휴관으로 발달장애인 중 폭력과 같은 도전적 행동이 악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났으며 한 실태조사에서는 90%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한국장애인총연맹,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조치 없었다. 안전을 우려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지만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비스 중단은 대부분 이용자나 가족의 통보로 이루어졌고, 또한 대부분은

무급대기로 종사자는 소득감소나 중단을 감내해야 했다. 방역물품 지원이 있어도 역시 대부분 한두 번에 불과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도 거의 없었던 셈이다(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사회서비스의 중단이 아니라 안전한 서비스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격리와 휴관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잠재적 감염원으로 간주하여 봉쇄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하는 식의 대응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던 해외의 사례와는 무척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적 검사, 개인보호장구 비용 보조, 종사자에 대한 보너스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며(김유희, 2020), 세금기반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가진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에 약 5조원(32억 파운드)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인보호장구는 별도 배포하였고, 요양시설 감염방지 비용도 별도 지원하였다(Dunn, Alleh, and Alderwick, 2020).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모든 코로나19 대책은 방역에 편중된 문제가 있었다. 방역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나 지원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일방적 제한조치에 초점이 있을 뿐 당사자나 가족의 삶과 권리는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비대면 서비스 개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고 시급한 논의는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할 것인가 이겠지만 주변적이고,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방역이외의 사회서비스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시대에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위협하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어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시 매번 교체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지급과 함께 이상이 있으면 설 수 있도록 유연한 유급병가와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감염병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나, 방치되는 문제는 없는지 복지, 의료, 주거 등 관계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위험성이 드러난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로 전환

그 다음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집단 수용 방식이 우선되어왔던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해왔던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이전이라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인으로서의 삶을 배제당하고 집단적 관리의 대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적 차원에서부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체계는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인돌봄에서 가장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하루에 한 번 최대 4시간 정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전적인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시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 보험에서 시설입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1, 2등급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확대된 것이 요양병원이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의 10배가 넘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김태일 외, 2018).

장애인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있지만 장애 정도 등에 따라서 더 높은 단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증이나 발달 장애 등 더 돌봄이 필요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용득, 2016). 이러한 이유로 가족이 나이가 들수록 결국 시설로 가게되는 과정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을 모두 고려하면 거의 장애인 20명 당 1명 가까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박숙경 외, 2017).

정부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ary care)의 추진을 표방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이를 보편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0a).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의 개편 계획은 없이 별도의 예산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 제도는 시설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와 반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존을 최소화시키는 서비스 방식의 전환 필요

따라서 코로나19시대에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은 그 위험성이 확인된 시설중심 돌봄을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정부에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인 개편을 포함하여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그것은 대면 서비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대면 서비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에서 받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를 가장 명시적인 정책방향으로 추진한 바 있었던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었다(DHSS, 1989). 이를 코로나19 시대에 적용해보면 당사자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강화시켜 불필요한 의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재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식을 당사자 참여와 주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설계할 때 최대한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여 스스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적절한 보장구, 주택 개조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 수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서비스의 과제를 논의해 보았다. 이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방역에만 편중되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당사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변적일 수밖에 없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위협성이 드러난 시설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현재의 별도 사업처럼 추진되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은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환을 통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결국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돌봄이 필요한 때에 최대한 존엄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이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유휘 (2020).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3, 60-70.
- 김용득 (2016).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서비스 연구, 6(2), 1-28.
- 김윤 (20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이용체계 정비 방안.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 자료집, 19-30.
- 김태일·김나연·김보영·이주하·최영준·최혜진 (2018).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 박숙경·김명연·김용진·구나영·문혁·박지선·정진·정창수·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0a).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보건복지부 (2020b).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 및 지원정책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ZERO운동의 방향. 코로나19-사회경제 위기대응 정책제언집담회 자료집, 28-33.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20).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 전국적 확대를 반대한다. 입장, 3월 10일.
- 송근배 (2020).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효과성과 대안 고찰. 제31회 대구사회복지사 Workshop 자료집, 85-93.
- 이지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집단감염 차단 해법 제시, 구미일보, 2020년 3월 23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03.17.). 지자체의 무책임한 집단 코호트 격리 선언을 멈춰라!. 성명.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2020). 고위험군에 대한 돌봄체계 및 개선방안.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 자료집, 49-5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 코로나19, 도미노처럼 무너진 장애인의 삶. 월간 한국장총, 395, 1-15.
- DHSS, 1989, Caring for People: Community Care in The Next Decade and Beyond. London: HMSO.
- Dunn, P., Alleh, L., Humphries, R. & Alderwick, H., 2020, Briefing: Adult Social Care and COVID-19 – Assessing The Policy Response in England So Far. London: The Health Foundation.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들어가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폐쇄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사업운영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노인들의 삶이 열악해 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인 시기에 진행한 코로나 블루 조사에서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의 우울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은 수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 중에 일부는 중증의 고위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1세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임시적인 것이 아닌 앞으로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방식도 대비해야 할 것이며, 정부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이 검증됨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처음 시작된 이후, 노인들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입증되면서 지금까지 그 사업량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 노인의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빈곤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초기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면서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소득보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2020년 10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과 외로움 정도, 사회적 관계에서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비대면·야외 활동의 중요성 체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계속되었는데, 그 방법은 대부분 비대면 활동이나 야외활동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면,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추진 방향은 소규모 야외 활동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활동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수요처의 거부 등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관내 방역 활동, 밀반찬 배달, 동영상 제작 후 수요처 제공, 환경미화단, 주차장 관리, 전화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되어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공공근로활동이 실외청소, 방역활동으로 전환되면서 활동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

되었다. 또한 비대면 안부확인과 영상제작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 인정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 특성상 온라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일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가능하였다.

감염병 상황을 대비한 노인일자리사업 방안 모색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 방안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방법과 교육방안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상황은 감염확산방지라는 최우선의 목표가 중요한 만큼 유연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유연한 근로 기준 및 평가 방식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역물품의 정기적인 지급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매뉴얼, 기관 차원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지침을 통해 수행기관, 공공시설, 학교 등 수요처에서도 공통된 지침을 통한 일률적인 사업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감염병 대비 비대면과 야외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재구성하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대면·야외활동 우수사업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으로 비대면·야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와이파이 보급,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비대면 교육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유세차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근린공원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교육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상시적인 대면·비대면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대면교육으로 진행되던 교육에 익숙한 노인들이와 종사자들은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컸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통 교육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비대면 교육이 강사들의 일자리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면과 비대면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며

코로나19 감염병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노인들이 중단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노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회복력은 가장 약한 부분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여부로 확인될 것이다. 향후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논의와 대안 모색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박신영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삶의 변화. Land & Housing Insight. Vol. 38, 6-13.
- 서울시 강동구청 보도자료(2020.07.17). 포스트 코로나 대응 복지 실태조사, 서울: 강동구청.
- 신영전 (2020). 코로나19 대응행시기의 보건복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보건사회연구, 3월호, 5-10.
- 유병선 (2020).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관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실태와 과제.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온라인 세미나 자료집, 5-44.
- 유병선·장백산·이민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경기복지재단.
- 이석원·이윤석·허수정·정연백·신재은·박하나·김두리 (2014).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이소정·정홍원·최혜지·배지영·박경하·윤남희·안세아·정은지 (201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조, 경로당 못가고 집에만...완도 노인 54% 우울해, 광주일보, 2020년 7월 9일.
- 정재환 (2020).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61호.

ICT와 노인일자리,

- 스테인드글라스같은 그 불투명하지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하여



한은지
이천시니어클럽 팀장

당신은 ICT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역시 돌아오는 답은 '모르겠다'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신문기사에서 매일 접하는 것이 ICT임에도 말이다. 인공지능(AI), 로봇(Robotics),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등 사회복지사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Y세대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들이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사돈의 팔촌쯤 되는 누군가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의 ICT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복지에서의 ICT를 '노인일자리사업'라는 한 분야에서 몸담은 사람이 함께 이야기해보자 한다.

우리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장형사업단 중에서 로봇과 함께 협업 중인 ICT체험카페가 있다. 시작은 단순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누군가의 눈길을 끌고 싶어서 한 고민이 그 시초이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사업장들이 카페인데,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노인일자리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아이템들을 발굴했다. 지역과 상생하면서도 노인일 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카페를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TV를 보니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나왔다. '저놈 똑똑한데? 어떻게 정확한 속도와 위치로 멈추지 않고 움직일까?' 찾아보니 꽤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고민이 되었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카페에 로봇을 도입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반대로 로봇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하나둘 생각이 났다. 시장형사업단, 특히 카페사업단을 운영해본 자라면 공감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것. 실무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어르신들에게 POS기기를 켜고 끄는 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그 순서를 포스트잇으로 표기해보아도, 어르신들은 다시 돌아간다. 현장에서 머무는 기나긴 시간과 동시에 사무실에 끊임없이 쌓여가는 서류들을 보면 때로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미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걸?' 싶다. 다시 돌아가서, 로봇을 인간의 할 일을 뺏는 대적자가 아닌 부족함을 돕는 조력자로 바라보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였다. '어르신들도 커피를 내리지만, 바쁠 때는 로봇 바리스타가 함께 커피를 내려 보면 어떨까?' 여러 로봇업체에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또 로봇이 실제 학습하는 핸드드립 브루잉 일련의 행동을 함께 교정해줄 커피업체를 찾게 되었다. 여러 가지 벽이 있었다. 일단 보기와 달리 로봇이 굉장히



정교하고 똑똑한 만큼 디테일하게 그 행동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 핸드드립 한 번을 위해 커피가루를 드리퍼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 브루잉하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이 매 분초의 초까지 쪼개져 로봇에게 학습되어야 했다.

로봇의 팔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각도로 움직여야 하는지, 브루잉의 일정한 물줄기를 위하여 어떠한 높이에서 어떠한 각도로 움직여야 하는지. 표현 그대로 생고생했다. 누가? 로봇공학자가, 바리스타가,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처음에는 회의감도 들었다. '내가 사회복지사지 기계공학자인가? 단순하게 가면 될 것을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올까?' 모든 과정을 거쳐 카페를 정식 오픈하고 운영 중인 현재, 답을 하자면 '틀린 길은 아니었다'이다. 겪어보니 'ICT란 분야는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꼭 함께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진다.

사회복지와 ICT. 여러분은 얼마나 접해보았나? 우리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ICT휴게실을 보니, 참으로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게임도 있고,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교육도 한다. 또 독거어르신들 댁에는 AI스피커가

놓여져 위급상황시 빛을 발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그러한 사례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어르신 혼자 계신 와중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OOO 나 좀 살려줘야겠어' 그 한마디에 AI스피커가 119로 긴급구조요청을 했다. 결과는 해피엔딩, 위급상황에 놓인 어르신은 제때 구조되었고 치료받아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에서의 ICT는 어떠한가? 많이 부족한 자이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ICT를 활용하여 변화를 주자. 노인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노인인구수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하다.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불과 20년 전 노인일자리가 태동했던 그 시기만 해도 베이비부머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이미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빠르게 노인일자리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은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 같다. 머리로 는 알고 있다. 그런데 ICT를 노인일자리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솔직히 그것은 우리자체의 힘으로는 안된다. 말그대로 본업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는, 아직 연구개발 중인 정보통신기술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방법은 '협업'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일해보자는 것이다. ICT 속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경험을 접목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노인일자리 실무자들이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보는 것에서 시작해본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ICT를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우리도 ICT를 좀 더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ICT를 구상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앞서 언급한대로 기술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ICT를 이해한다면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ICT를 통하여 영감을 얻어보자는 것이다. 솔직히 AI스피커가 독거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조력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분명 ICT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도 존재한다. 기술 사이사이 존재하는 간극을 인간이 채우자는 것이다. 분명 미묘한 틈새는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예산을 들여 매년 반복되는 안전교육 등을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진행해보는다면 어떨까? 실제상황에 빚대어 교육해보는다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사회는 점점 ICT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 같다. 우리 노인일자리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CT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세대별로 접근하여 전략화하고 그 지평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최근 한 자동차회사의 XYZ세대를 언급하는 광고가 눈길을 끈 적이 있다. 한 가정 안에서 3개 특성의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가 바라보는 세대구분을 봤을 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우리 어르신은 베이비부머세대까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베이비부머세대처럼, 조금 뒤에는 X세대의 편입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현장의 실무자들은 현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편입될 세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2000년대 초, 컴퓨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세대 간의 차이가 역사상 가장 큰 시기라고들 한다. 가치관, 사고의 차이만이 아닌 기술에 대한 익숙함까지 말이다. 이렇게 세대끼리도 격차가 있는데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 어르신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누구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누구는 아직도 집전화 밖에 없기도 하다.

현재도 그러한 격차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에 대한 격차를 기술로 풀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 개인이 가진 기술의 익숙함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 대안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세대연구에서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세대에 관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더 세분화하여 수집하고 우리가 가진 막강한 공공데이터와의 결합,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러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을 더 전략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노인일자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을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동선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러한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ICT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 지자체의 수행기관들이 지금도 함께 뛰고 있다. 2인3각의 이 마라톤이 결국엔 누군가의 행복, 우리사회의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 ICT와의 협업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그 불투명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의 아름다운 행복을 참으로 기대한다.

미래사회 노인일자리, 사회적 가치의 생산으로 대전환해야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우리가 꿈꾸던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학의 발달로 장애를 극복하며 건강한 생을 축진하는 한편,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실과를 국민들이 함께 나누는 유토피아적 사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급전직하(急轉直下)한,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은 미래사회를 반강제적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의 행보로 우리사회가 유토피아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사회가 5년, 10년 이후의 세상을 의미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당장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가파른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뀌어나가고 있으며, 지극히 당연하게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된 이래 사업량이나 내용면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던 노인일자리 사업이지만, 민간형일자리 경우 지금도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나 재화생산을 위한 자영업, 그리고 특정 분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공익활동형 역시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적응, 인권보장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는 다소 꺾리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에 한정된 지면인 점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침체와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그에 따른 세대갈등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사업정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2020년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직의 정규직 전환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후폭풍을 불러왔던 사건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직은 실상 취업생들의 공채 대상 직군이 아니었음에도 큰 반발에 직면했고, 일반 국민들도 좋은 일자리가 드문 요즘 세금낭비인 동시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비난했다. 왜 국민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결정에 그렇게 반발했을까? 정치적 이유는 차치하고, 당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일자리 축소, 기약 없는 무급휴직과 강제퇴직, 그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었다. 더 넓고 더 많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쓰여야 할 정부재정이 일부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며 역차별적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과거 소규모 사업량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용돈벌이'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 하던 시절과 달리 100만 일자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이자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느 순간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정부예산 투입 효과성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이 노인에 대해 가진 이미지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된다면(혹은 이미 그렇다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지 오래된 자영업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정부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세제혜택, 근거법 예외 적용, 사회보험개편 등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논리가 과연 국민저항을 타개할 만큼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공익활동형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참여 어르신들의 태도나 활동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결국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존의 내용과 형태에서 벗어나,

참여 노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안전망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고민과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둘째, 급변하는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신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인프라 구축 문제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과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요양원 등 집합 돌봄 시스템에서의 감염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백신 접종 이후 혼절한 70대 어르신들이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하는 등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족이 아닌 가구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 접근 방법의 변화가 시급하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가족 부담, 그 중에서도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족갈등과 학대의 증가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기에 급격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전은 정보취득의 격차가 곧 빈부의 격차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문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방식은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역무 자동화와 역무원 감축으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제한, 장애인 비친화적 키오스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용 시간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신 접종에 의해 코로나가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해도,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밝힌 우리 바로 앞의 6개월 뒤, 1년 뒤 혹은 그 이상의 미래사회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실질)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기준 개념이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서 비롯된 개념이고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연령 범위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을 오로지 유형의 재화 생산, 즉 현행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형태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직에 계속 재직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어쩌면 이런 유형의 재화 생산에 주력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변화와 우리 사회의 내수 시장규모, 자영업자 비율, 전통적 일자리 소멸 등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유지 내지는 장기적으로 축소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자동화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아동, 거동 불편 노인, 경증 치매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보조와 이동권 보장의 보조적 역할 등의 사회적 가치 생산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건강한 노인, 고학력의 노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지금, 일의 보람과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들에게 더 적합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용료 지불 여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 법에서 정한 수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활동지원사’, ‘시니어 아동돌보미’ 등과 같은 자격을 공식화할 수도

있고, 활동 범위와 내용을 기존 돌봄 인력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만큼 이용료는 저렴하게 책정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흐름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이나 공익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잠시 언급했지만 고학력에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노인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 돌봄 지원, 그리고 노인들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문제 예방을 위한 정보화 교육 활동 등이 주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공식적 돌봄과 보호 영역 외에 보완이 주목적이므로 이전처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과는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커뮤니티센터의 확대와 자유로운 이용,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많은 수행기관들이 운영 중인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백마 화사랑” 카페 역시 7월 이후 위와 같은 사회적응지원과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내용들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아젠다 도출과 사업설계를 위한 상설기구로서 “복지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싱크탱크” 구성을 제안한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 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지역욕구와 결합하여 적합한 제공자와 필요한 수요자가 만나 “형성”되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60+교육센터의 운영방향



하세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부장

1) 60+교육센터는 어떤 곳?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60세 정도의 나이로는 노인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이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원하거나 자격증 취득, 자원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16년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교육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현재 명칭인 60+교육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

60+교육센터에서는 크게 취업지원교육과 역량개발 교육 등 2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교육은 교육수료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맞춤형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일자리는 원하는 노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단순한 교육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둘째, 역량개발교육은 노후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개발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에 자격증,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취업 이외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3) 어떻게 운영되나?

올해 2021년에는 전국에 26개소의 60+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운영 또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60+교육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본부가 소재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전주, 창원, 제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과 전북에 각 3개소, 제주 2개소, 부산·대전·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 1개소 등 총 16개소를 위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60+교육센터의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4) 어떤 교육들이 있나?

취업지원 교육과정으로는 택배물류관리원, 문화재 발굴 지원, 농산물 전처리, 요식업 서비스 종사원 양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교육을 제공한다. 역량개발

〈2021년 60+교육센터(위탁기관) 현황〉

연번	유형	권역	기관명(교육센터명)	과정수	교육인원(명)		
					계	취업지원	역량개발
1	취업지원형(9)	서울	남서울실용전문학교(서울60+교육센터(동대문))	7	165	100	65
2		부산 울산	(주)실버종합물류(부산60+교육센터)	7	105	105	-
3		대구 경북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경북60+교육센터)	5	200	180	20
4		광주 전남	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전남60+교육센터)	11	292	292	-
5		대전 세종 충청	건양대학교(충남60+교육센터)	13	240	150	90
6		강원	(재)강원도일자리재단(강원60+교육센터)	6	175	135	40
7		전북	전주시니어클럽(전북60+교육센터(경원))	7	150	150	-
8		전북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전북60+교육센터(익산))	9	200	110	90
9		제주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제주60+교육센터(용담))	11	130	110	20
소 계				76	1,657	1,332	325
10	역량개발형(7)	전북	전북노인일자리센터(전북60+교육센터(중화산))	12	310	180	130
11		제주	(사)치매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제주60+교육센터(도남))	7	220	-	220
12		대전 세종 충청	충남대학교(대전60+교육센터)	4	125	-	125
13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서울60+교육센터(서초))	11	231	63	168
14		경기 인천	김포대학교(경기60+교육센터)	7	150	20	130
15		경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경남60+교육센터)	17	170	-	170
16		서울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서울60+교육센터(강동))	1	60	-	60
소 계				59	1,266	263	1,003
계				135	2,923	1,595	1,328

교육과정에는 가구제작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바리스타·심리상담사·반려동물 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 그리고 요즘 분들이 관심을 갖는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이나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방법 등이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 새롭게 개발되는 신규 일자리 참여 노인을 위한 직무교육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하여 창출한 '석유에너지 파수꾼 사업'이나 공익방송을

청취하면서 세부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방송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익방송 모니터링원', 아이스팩을 수거·재생하여 중소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60+교육센터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취업과 역량개발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갈 예정이다.

베이비부머,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라



최철호

마포시니어클럽 관장

예전에 자녀들과 인천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중 눈에서 뿜 것이 일종의 직업체험관으로 아이들이 자동차정비사, 아나운서, 경찰관 등의 옷을 입고 해당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이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발견하고 향후 직업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은퇴 후 준비 없이 퇴직금 등으로 사업(자영업 포함)을 시작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며 '미리 체험이라도 해보시고 진행하셨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은퇴하신 분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찾아보고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014년 마포구 노인복지 기금 사업에 해당 내용을 시범사업('마포50+행복

아카데미')으로 제안,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다. '마포50+행복아카데미'의 목적은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듯 은퇴자에게 현장감 있는 직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는 데 있다. '직업체험아카데미',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원데이 클래스', '명사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직업체험아카데미' 과정은 주 3일 한 달간 진행되며, 성격검사, 바리스타 체험(외부 전문교육장에서 진행하다 현재 시니어클럽 내 매장에서 진행), 치킨 체험(BBQ치킨대학 체험 이후 동네 치킨집에서 진행), 편의점 체험(CU편의점 교육과정 참여), 귀농·귀촌 교육(전문가 강의수강)등 으로 진행하며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매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리스타자격증과정(1, 2급)', 배우고 싶은 것을 하루 동안 체험하며 배우는 '원데이클래스',

〈표〉 마포50+행복아카데미 과정

연번	과정명	주요내용	인원	기간
1	직업체험 아카데미	기질검사, 직업적성검사, 도슨트현장체험, 바리스타입문, 치킨체험, 귀농귀촌 입문과정 등	회당 20명	1달 과정
2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커피이론,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스티밍 카푸치노 제조, 매장실습 등	회당 8명	1달 과정
3	원데이 클래스	도장만들기, 막걸리 빚기, DIY액자만들기, 핸드드립커피 체험, 테라리움만들기 등	20명	격월 1회
4	명사특강	메이크업, 부동산, 반려동물 키우기, 노년기 정신건강, 유튜브 활용 등	50명 내외	격월 1회
5	외부연계 과정	CU편의점 교육 연계	5~10명	분기 1회
6	취업알선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인턴십 연계		수시
7	기타	동문회, 보수교육 등		수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명사특강' 등이 있다. 명사특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시니어클럽에서 50%를 참여자가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부머 사업(마포50+행복 아카데미)을 진행하면서 시니어클럽과 베이비부머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에 도움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시니어클럽에는 인프라(생산 및 판매 시설)가 갖추어져 있어서 베이비부머가 해당 분야의 업종을 선택하기 전 시니어클럽의 인프라를 통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바리스타를 예로 들면 시니어클럽 내 매장에서 직접 근무를 통해 커피 제조, 고객 응대, 장비 운용, 포스 조작 등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강의실에서 들을 수 없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분야가 본인에게 맞는지 보다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분야를 운영하기 위한 기법을 얻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시니어클럽이 도움이 되는 경우

베이비부머 사업 대상 연령대가 50~64세 이기에 '마포50+행복아카데미'에 참여자 중 60세가 넘는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고, 50대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60세가 되기에 시니어 클럽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해당 직무(예. 바리스타)에 대한 훈련까지 마친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현재 4개 매장에서 55명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고 향후 카페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기에 훈련된 바리스타의 선발이 용이하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반 수료자의 경우 우선 채용을 하고 있기에 참여자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숨 쉴 겨를 없이 2차 베이비부머(70~74년생)의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부머 전문가를 미리 양성해야 한다.

2007년 6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노인생애 경력조연자(SLCA)' 양성과정처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미리 양성하여 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성된 이들을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파일럿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각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장감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적인 전용 시설도 필요하지만 베이비부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에 현장감 있는 체험공간(일반 사업장)이 필요하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 내 인프라(매장, 생산시설 등)를 활용한다면 각 직종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여 은퇴 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은퇴 전 생애전환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40세, 66세 진행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처럼 은퇴 전(40대 후반)에 있는 국민에게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처음에는 몇몇 지역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많은 국민이 은퇴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 뵈는 은퇴를 겪은 분들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원치 않는 일을 약 2~30여 년간 해 오신 셈이다. 평생 동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꿈은 누구나 지니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이제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활용할 때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이재춘

노무법인 창평 경기북부지사 대표

1. 들어가며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①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②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종사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유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산안법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한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사후 처벌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적용범위와 사업주의 책임범위

1) 적용범위

내년 1월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라 함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법제2조2호)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제3조). 보호대상자에 대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까지 포함한다(법제2조7호)고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다.

2) 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있다(법제3조, 제4조). 사업주라 하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법제2조8호). 그리고 경영책임자라고 하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법제2조9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법제4조).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법제5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직업병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제6조제2항). 또한 동일한 중대재해가 5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제6조제3항).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제8조).

3) 수행기관의 역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형 등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법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참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안전표지 부착 확인하고 때에 따라 위험한 장소 등에 보호덮개 등의 위험방책 설치, 안전관리지도하 현장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권유한다.

3. 결론

내년 1월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해 수행기관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에 대해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나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검토를 통해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강익구

편집인 박경하

편집위원 윤민석, 신창환, 서정민, 강동훈, 김현숙, 신상훈, 강혜정, 방효정, 김문정, 배재윤, 김가원

통권 제2호

발행일 2021년 6월 25일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전화 031-8035-7500~9

팩스 031-819-0790

홈페이지 www.kordi.or.kr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